전두환, 비자금으로 불린 재산 1조 추정

전씨 일가 추징금 완납해도 '남는장사'

시민들 "이자까지 환수… 비리 수사 계속해야"

전두환(82) 전 대통령이 10일 추징금 완납 계획을 발표하면서 16년 묵은 빚을 갚았다. 그러나 천문학적 규모의 부정축재에 대한 죗값을 온전히 치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시민사회도 16년 만의 납부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만큼 전두환 일가의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씨 일가는 애초의 비자금을 종잣돈 삼아 미납 추징금을 훨씬 뛰어넘는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1조원 안팎일 거라는 관측도 있다.

전씨 일가 입장에서는 턱밑까지 쫓아온 검찰 수사의 속도와 강약을 조절하고 전국민의 비난 여론을 어느 정도 무마하는 추징금 완납이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모순은 과태료나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체납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에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붙는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한다.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에도 이자 개념이 있다. 패소하고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에 적용해 보면 확정판결을 받은 1997년 4월17일부터 이날까지 이자는 7234억원이다.

최소한 물가상승률이라도 적용해 더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1997~2012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어림잡아 68%에 달한다.

전씨 일가는 추징금을 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법의 허점을 16년간 악용해 왔다. 강제집행을 피해 수백만원을 자진 납부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2205억원의 추징금 자체가 전씨 비자금의 일부일 뿐이라는 데 있다. 전씨는 1996년 2월 열린 비자금 사건 첫 공판에서 "재임중 모두 7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통치자금'으로 써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 당시 전씨가 은닉한 재산을 2000억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5·18 기념재단과 5·18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납추징금 납부는 역사적 과오를 씻는 마지막이 아니라 그것들을 밝혀가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전두환 군부의 대국민 사과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탈세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을 요구했다. 또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5·18 학살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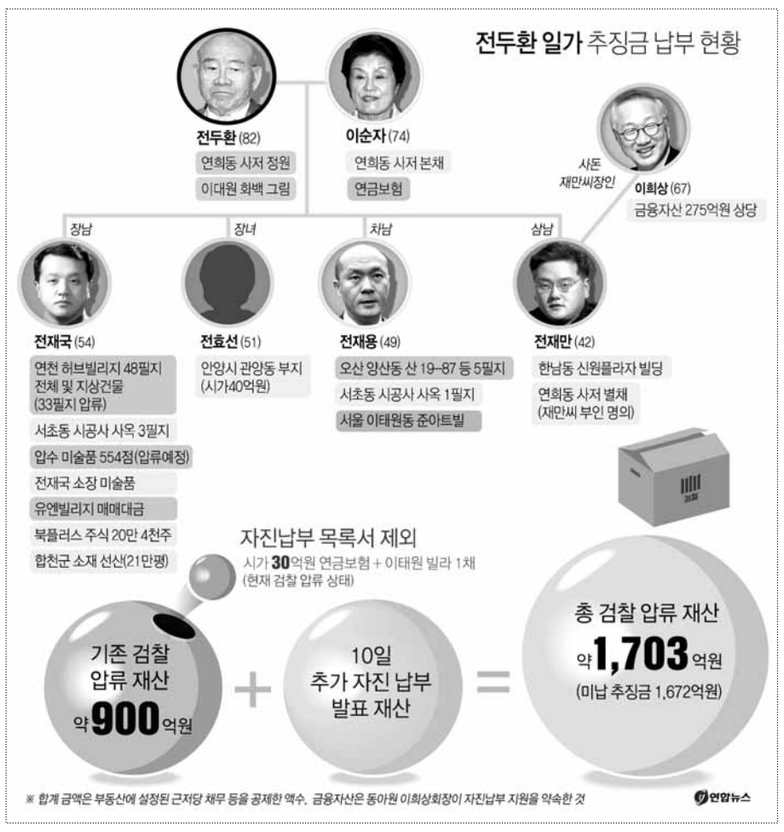
광주 경제정의실천연합 김기홍 사무처장도 "추징금 연체 기간에 물가상승률만 고려해도 이자 수익이 최소 70% 이상인데 원금만 추징할 수 있는 현 체제를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연합뉴스

檢, 전담팀 구성 110일… 16년 버티다 백기투항

추징법·여론지지 힘입어 전방위 수사 압박

전두환 일가 추징금 납부 현황



全 추징금 환수 성공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어일가가 10일 1672억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히면서 16년 동안 진행된 추징금 환수 작업이 일단락됐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에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이 구성된 지 110일째 되는 날이다.

지난 5월 24일 전담팀이 구성될 당시에만 해도 검찰 내부에서조차 추징금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과 여론의 지지라는 무기를 양손에 받아든 검찰이 '일가 형사처벌'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면서 결국 전씨 일가의 백기투항을 받아냈다.

◇채동욱 총장 "정의 바로세우기…모든 방법 동원"=1997년 확정 판결 이후 순탄치 않았던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문제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세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씨의 미납 추징금 시효가 오는 10월로 만료된다는 사실이 다시 부각되면서 검찰은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집행 전담팀을 구성했다.

채 총장은 "계좌추적, 자산추적, 압수수색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추징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제정에 들어갔고 결국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서 환수 작업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법 통과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는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늘어났고 장남 재국씨와 차남 재용씨 등 전씨 가족이 소유한 재산의 연원이 전씨의 비자금이라는 점만 밝혀내면 해당 재산에 대한 추징도 가능해졌다.

추징법이 시행된 지 나흘 만인 7월 16일 검찰은 전씨 사저에 대해 재산압류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일가 소유의 회사 사무실과 주거지 17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추징금 환수 작업의 막이 올랐다.

◇檢 환수에서 수사로 전환… 형사처벌로 압박=당초 '추징'에 무게를 뒀던 검찰의 칼끝은 '전두환 추징법' 시행과 전씨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치면서 수사전환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했다.

단순히 1600억원이 넘는 거액 추징금 환수가 아니라 전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수사를 통해 그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검찰은 지난 8월 12일 전씨 일가 중 가장 먼저 처남 이씨를 소환함으로써 전씨의 미납추징금 관련 활동이 '환수'에서 '수사'로 본격 전환됐음을 선언했다.

검찰 수사는 지난 3일 차남 재용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절정으로 치달았다.

재용씨는 강도 높은 검찰의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를 묻는 질문에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라며 의미있는 말을 남겼다.

이를 전후해 일가는 전씨의 연희동 자택에 모여 미납 추징금을 분담해 자진 납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고 결국 9일 변호인을 통해 공식 납부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했던 추징금 환수 작업이 일단락됐다.

◇"사업·마지막 남은 명예 지키자" 판단한 듯=전씨 일가가 16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납부키로 결정한 것은 검찰 수사로 인해 사업상 차질을 빚으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현실적 판단이 우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사 11기 동기생이자 '60년 지기', 대통령직을 물려주고 이어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근 미납 추징금을 완납한 점도 전씨 측의 심경 변화를 몰고 온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화순 동면초등생들의 특별한 수학여행 ▶2 가정의 달 무색케 한 우울한 범죄들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시효 겨우 5개월 남았는데…

전두환 추징금 손놓은 국회

징수특례법 1년째 낮잠…정부는 매년 수억 들여 경호

5·18 광주민중항쟁 유혈진압사태의 책임자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부과된 추징금(追徵金) 공소 시효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회가 미납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서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징수법'이라는 약칭까지 붙으며 발의 당시 국민의 관심이 쏠렸지만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 1 법안 소위원회에 계류된 채 먼지만 쌓이고 있다.

세로 통과 여부조차 미지수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

전두환 추징금 환수 정부가 나서라

광주 5·18단체 등 시민사회 촉구 잇따라

"부정축재 몰수법 6월국회서 처리해야"

5·18 광주민중항쟁 유혈진압사태의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 납부 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광주일보 7일자 1·3면)과 관련, 광주 시민사회와 진보정당 등이 추징금 미납분 및 불법재산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광주진보연대 등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오는 27일 5·18 추모행사 마무리 후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을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광주진보연대는 전국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와 전직 대통령 예우자격을 상실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 금지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은 집행과와 범죄수익환수팀, 계좌추적팀의 인원을 모아 공판송무부 산하에 TF팀을 꾸릴 계획이다.

앞서 5·18 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3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재산 환수와 경호 중지를 촉구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숨은 재산을 찾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집권 초기에 국무총리를

광주일보 5월에 첫 문제 제기

언론·시민단체도 한몫

16년 간 "통장 잔고가 29만원 뿐"이라며 국민을 우롱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스스로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전씨의 백기 투항은 5월 이후 들끓기 시작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가 어려운데다, 국민적 지지를 업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는 검찰의 수사를 비켜갈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특히 추징금 환수 여론을 촉발, 국회에 잠들어있던 추징금 징수 법안을 통과시키고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하는 데 광주일보를 비롯한 언론 보도도 계기가 됐다.

광주일보는 지난 5월 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 기획물의 하나로, '시효 겨우 5개월 남았는데… 전두환 추징금 손놓은 국회'라는 제목의 기사〈사진 위〉를 내보내며 16년간 집행되지 않았던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촉구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사태의 책임자로 진정성이 담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다, 지난 1997년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징당한 금액 2205억원 중 167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광주일보는 당시 국회에 계류돼 있던 추징금 징수법의 내용을 전하는 "29만원 호화생활' 전두환 가족 출처불분명 재산 추징' 기사, '29만원 할아버지'로 알려진 전씨를 소재로 한 예술 작품과 이른바 '전두환 추징금 환수 특례법'을 발의한 김동철 의원의 인터뷰 등도 함께 실었다.

이어 5월 20일자 1면 '전두환 추징금 환수 정부가 나서라'〈사진 아래〉, 6월 5일자 1면 "전두환 추징법' 6월 국회 통과 탄력' 등 20여건의 기사를 통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추징금 미납분 및 불법 재산 환수를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이후 한겨레가 '전두환 추징미납 1672억, 그냥 눈감을 건가요'라는 5월 20일자 기사를 내보내며 환수 여론을 촉발시키는 데 힘을 실었다.

이후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에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렸고 국회도 지난 6월 27일 전씨에 대한 미납 추징금 시효를 2020년 10월로 연장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환수 촉구에 힘을 실었다. 시민단체들의 환수 촉구 목소리도 계속됐다.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은 검찰은 110일간 전씨의 곳간지기로 알려진 처남 이창석(62)씨를 구속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 수사로 전씨 일가의 자진 납부를 이끌어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등을 완전 해결 시켜줍니다.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펌프★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아파트용) 60,000원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주택용) 50,000원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아파트용) 40,000원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주택용) 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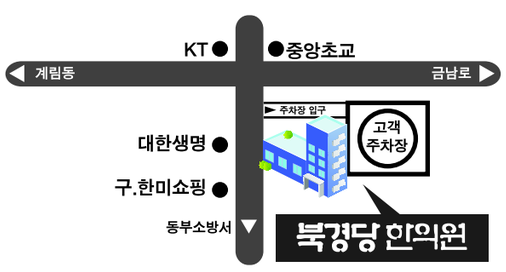
제일건강 | 문의전화 :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현 장 직 사원모집

전문인력관리회사인 당사에서는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근무가능한 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급여 : 1,800,000원
- 상여금 300%분할지급 (3개월 후부터)
- **6개월 이상 근무시 정규직 가능, 상여금 400%**
- 근무시간 08:30~17:30 + 3시간 연장, 토요일 특근
- 여자사원은 35세 이하(경력자 40세미만 까지)
- 남자사원은 35세 미만으로 군필자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주민등록등본 각1부
- 근 무 지 : 하남 7번도로, (주)금호전기

☞ 초보자가능, 즉시근무, 장기근무가능, 작업환경좋음.

주식회사 엠 지

TEL. 062-681-5588 HP. 010-2580-3744
FAX. 062-681-5586

※버스운행 : 두암동 → 문흥동 → 오치 → 일곡 → 양산동 → 첨단지구 → 신창지구 → 신가 → 운남지구 → 월곡동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궁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